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동향

(제1회 '99-2-8 지구환경문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사회정책연구소의 박영숙입니다.

오늘부터 일곱번에 걸쳐서 청취자들과 나누고자하는 화제는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동향>에 대해서 입니다.

이제 329일이 지나면 우리는 새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세기를 걸쳐사는 세대인 우리에게 어떻게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열것인가 하는 과제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세계는 21세기의 문화가치의 중심을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오늘의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 오래전 공룡이 멸종된 환경에서도 도마뱀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지혜를 배워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하나는 일찍부터 문제시되고 있는 <산업공해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근래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입니다.

산업공해로 분류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굴뚝을 높이거나 정화시설을 설치하면 인근지역주민에게 끼치는 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공장과 피해자인 지역주민을 구분할 수 있어서 그 해결이 보다 용이하겠지요.

그런데 지구환경의 문제는 국경없이 넘나드는 문제이고 우리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점과 현세대인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해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지구환경문제의 경우 국제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연대활동이 필요하

다는 것입니다.

UN이 크고 작은 회의를 빈번하게 개최하고 다양한 국제협약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국제적인 민간단체가 서로 연계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인구는 늘고 있고 자동차는 반출되며 산림이 사라지고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고 쓰레기가 버려지는 가하면 탄산가스는 방출되고 있습니다. 환경훼손은 끝을 모른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구환경문제를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개선하려는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환경보전은 말로만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해야하는 것입니다. 지구환경문제가 아무리 거창하고 복잡해도 우리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전기 한동, 종이 한 장, 물 한점을 아끼는 등의 작은 실천에서 지구환경은 보전되는 것입니다.

지역환경문제가 누적되어 지구환경문제가 대두된데에서 세계의 환경인들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고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환경보전은 인간활동의 원점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발생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서는 IMF관리하에 있는 경제상황에서 환경걱정을 할 겨를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만불 소득일때에 3만불소득의 국민처럼 흥청망청살고 있을 때 이 고통스러운 IMF사태가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무역에 대한 환경규제인 그린라운드라는 환경IMF가 도적같이 찾아들기전에 경제IMF극복노력과 함께 환경IMF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자원고갈에 의한 지구환경문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동향

(제2회 '99-2-9 자원고갈의 문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사회정책연구소의 박영숙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환경문제를 자원고갈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 파괴현상은 지난 200년간의 산업화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민수용품 생산에 투입되면서 촉진되었습니다. 소비품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하는 현대인들의 소비미덕의 생활양식이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5억년이나 걸려서 만들어진 자연자원을 200년안에 다써버리는 소비구조에서 그 바닥이 들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되었던 지구정상회의에서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21세기 행동계획인 <의제21>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40장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제4장에서 지구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서 생산과 소비양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997년 6월에 뉴욕에서 <의제21>의 5년간의 실천평가를 하는 유엔환경특별총회가 열린 바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생산과 소비양식에는 지구정상회의 이후 5년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세대인같이 자원이 무한대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원낭비를 하다가는 물 기근, 에너지고갈, 식량부족, 자원고갈로 인류의 존속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유한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여준 것이 바로 자원고갈을 경고한 <성장의 한계>보고서였습니다.

자원고갈로 인한 지구환경 문제에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구석구석에서 자원절약을 위한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녹색소비생활운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운동의 방법의 하나가 녹색가게 운영입니다. 그 원리는 일단 만들어진 물품은 그 기능이 다하기까지 돌려가며 필요한 사람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재활용보다 더 환경부하를 덜 주는 자원절약방법은 물품을 수리를 거듭하며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서구의 대학촌이나 서민들이 사는 곳의 상가에는 으레히 자리잡고 성시를 이루고 있는 곳이 중고생필품 판매점입니다.

뜨개질하는 바늘에서 의류는 물론 가구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유학하고 있을 때 많이 활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IMF관리하의 경제위기 상황이 들어닥치면서 아껴쓰고, 나누어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생활양식인 <아나바다>운동이 상당히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중고품상점분위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용자들의 인식과 활용범위 그리고 운영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하나의 엄연한 상거래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독일같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의 편이를 도모하고 있는 환경백화점이 개점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중고품 상점이나 벼룩시장이라는 형태의 환경관련 판매점을 하나로 묶어내고 녹색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완스톱 백화점입니다.

녹색소비자들은 이 곳에서 친환경 인증마크를 받은 상품을 비롯해서 물품수리서비스, 안전한 먹거리구입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의 편이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원절약하는 녹색생활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편이시설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지구의 자정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지구환경문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동향

(제3회 '99-2-10 지구의 자정능력의 한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사회정책연구소의 박영숙입니다.
오늘 생각해보려고 하는 문제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정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지구환경문제입니다.

현세대인이 일찍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지구가 자정능력의 한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대의 <성장의 한계>보고서를 통해 자원고갈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물량적인 성장을 계속 추구해온 나머지 우리는 오늘날 자원고갈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폐기물, 폐수, 배기가스 등에 의한 처리문제와 환경오염 현상입니다. *자원으로 (비용이) 더들거우, 폐기물들은 더 많이 만들어내게는 되지만 아직은 처리가 안되는 것이라. 그러나 폐기물쓰레기는 결국이*
현대사회가 배출하고 있는 폐기물질은 그 양과 질이 지구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한계를 훨씬 넘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오늘의 자연계에는 쓰레기로 인한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물, 공기, 토양, 먹거리 등이 크게 오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치유가 어려운 질병을 비롯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환경호르몬에 이르기까지의 생명위협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연의 대인간 보복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는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계는 폐기물처리의 장소마련, 시설확충, 기술개발, 정책개발 및 인력투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때만이 아닌 버리는데에도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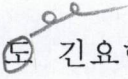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은 서구지방정부들의 예산서 항목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예산항목의 1,2순위에 올라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업무로서 뒤쳐져 있던 위생업무가 뉴욕시의 경우 소방국과 경찰국 다음으로 중요한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데에서도 얼마나 폐기물 처리업무가 예산이 많이 들고 중요한 업무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는 세계의 지방정부들에서는 폐기물을 오히려 자본 자원, 생산자재,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원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지켜볼만 합니다. <폐기물은 자원이야>라는 것을 잊혀져 버린 것은 아쉬움.

지역사회에서는 지금까지의 버리는 폐기물 처리체계에서 재생산해내는 체계로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비과정에서 분리수거를 통해 생산 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조업자들은 지역주민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순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하나의 직종으로서 '폐기물관리 사업이 자리잡을 수 없는 것인가' 생각해보게 합니다. 수작업을 요하는 물질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므로 폐기물을 감량할 뿐만 아니라 자재구입을 위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구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지 않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품을 아껴쓰고, 나누어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생활양식을 통해 우리가 후세에게서 빌려쓰고 있는 지구환경을 후세들도 쓸 수 있도록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지구환경과 인구폭증의 문제를 생각해보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동향

(제4회 '99-2-11 인구폭증)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사회정책연구소의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지구환경에 대한 인구폭증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엔인구기금의 1998년도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인구증가추세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증가될 경우 금년 6월16일 60억명을 넘게 되며 2025년에 80억 그리고 2070년에는 1백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구증가 추세의 특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례없는 증가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도의 세계인구가 25억이었던 것을 감안할때 87년도의 50억돌파는 30여년만에 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배가추세는 그 간격이 더욱 단축된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인구증가에 따른 논쟁의 중심은 인구증가가 경제발전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환경문제와 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중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가 그 결과로서 자원의 소비수요를 높이고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가된 인구는 식량증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피하고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규모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데서 문제가 커집니다.

20세기 후반의 발전도상국의 인구증가의 추세를 놓고 선진국측에서는 세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폭탄이라고 간주하는데 대해서 발전도상국들은 세계경제의 기반인 지구환경의 훼손은 세계자원을 독점하다시피 사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보다 큰 문제라고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한 국제회의에서 양 진영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있는 쟁점이 바로 이점입니다. 그결과 지구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구증가문제도 자원낭비의 문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유감입니다.

오늘의 지구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누구나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실천사항의 합의도출이 되지 않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인데 세상은 하나가 아닌 현상이지요.

2025년까지의 인구증가추세에서 또하나의 문제는 그 증가율의 절대다수가 발전도상국에서 발생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인구증가 추세가 심상치않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도상국들이 저마다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따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일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의 기대는 맑은 하늘에서 비를 기대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12억 인구의 중국이 현재의 발전모델에 따라 경제성장을 하여 국민의 소비수준을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빈민층에 이르면 지구가 4-5개 더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늘어나는 인구와 소비수준의 향상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의하면 21세기에 전세계 특히 아시아에서 자원부족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국인 중국이 수자원 고갈로 인해 농업생산이 크게 줄어 식량수입국이 된다는 것은 식량부족으로 전세계에 고통을 안겨 줄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온난화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우려되는 식량수급의 문제와 세계의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부족상태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양적인 공급만이 아닌 환경호르몬,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의 유해식품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내일의 화두는 도시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동향

(제5회 '99-2-12 도시화문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사회정책연구소의 박영숙입니다.

지구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화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눈앞에 두고 있는 21세기에는 세계인구의 90%가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엔 식량기구의 '98년도 연례보고서에서 보면 2005년까지 전세계적으로 도시인구가 시골인구를 능가할 것이며 앞으로 20년간 도시인구증가의 93%가 제3세계 국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로의 인구와 경제사회활동의 집중현상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생활폐수 등에 의한 수질오염, 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도시생활형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공동체의 더불어사는 정신의 붕괴현상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 도시화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덧붙여서 주변의 자연의 상실 더나가서 지구환경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산성우등의 지구환경은 선진국의 방만한 자원낭비의 소비행태와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인구증가로 인한 급속한 개발에 의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사회의 중심인 농촌과 사회의 일부였던 도시의 지금까지의 관계가 역전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드러진 도시화현상의 특징으로서는 도시가 대형화되어 간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에는 인구 1천만명이 넘는 도시가 2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중 12개가 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서울시가 바로 이들 중에 속해 있지요. *우리가 선진국은 이만큼이고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 많아요.*

이 보고서는 개도국의 경우 도시의 팽창속도를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0-15년 사이에 두배로 팽창하는 개도국의 도시지역에는 도시의 빈민촌화, 부정부패, 열악한 위생상태로 인한 질병의 만연, 물가상승 등의 심각한 문제가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주변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인구의 과도집중은 환경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지역사회들은 저마다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그 지역 단위가 작을수록 효과적이며 정부 혼자서가 아닌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의제 21>의 제정 및 실천입니다.

서울시는 97년 6월에 그리고 십여개의 기초자치단체들도 각각 내 고장을 녹색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정부, 기업, 시민 3주체가 어떻게 행동계획을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 환경행정을 시민과 함께 하기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금년도의 사업방향을 녹색서울만들기 행동강령인 <서울의제 21>의 실천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서울시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 살기좋은 서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시간은 2월 18일에 이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지구환경과 빈곤문제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환경관리원 환경관리시스템의 ISO 14001의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으므로 서울시를 녹색도시로 만드는 일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애써서 환경입니다.

지구환경과 환경문제의 국제적 동향

(제6회 '99-2-18 빈곤문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사회정책연구소의 박영숙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지구환경파괴에 요인이 되고 있는 빈곤문제와 빈부의 격차의 실상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회의 에서의 선진국과 발전도상국간의 단골쟁점은 환경파괴의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선진국은 가난한 나라의 인구증가의 문제와 빈곤으로 인한 자연자원수탈의 문제를 들고 있는가하면 발전도상국의 주장은 선진국들의 자원다소비형 생활양식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주장이 모두 시정되지 않고서는 지구환경의 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인구조절과 빈부격차 문제 해소, 그리고 자원절약형 소비양식이 바로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개발계획이 내놓은 98년도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98년도의 세계의 소비규모가 75년도의 6배인 24조 달러로 전망하면서 소비의 극심한 불평등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인구의 20%가 세계자원의 86%를 소비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20%는 생존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인도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30배나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며 지구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부격차의 문제는 같은 나라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요.

기억할 것은 우리나라도 92년도부터 20%의 다소비국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97년도 유엔환경특별총회의 자료에서도 지적

되고 있습니다.

100여개 국가의 국민소득은 15년전보다 줄어들었고, 13억인구의 하루소득은 1불도 되지 않으며, 세계인구중 부유한 자와 빈곤한 자의 소득격차는 30년동안 30배에서 60배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외채가 계속 늘어 2조1천억불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채에 시달리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빚을 갚기 위해 또는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인 자연자원을 헐값으로 선진국에 팔아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빈곤에서 빈곤은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지구환경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95년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개발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96년을 <빈곤퇴치의 해>로 선포하고 그에 따르는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회의의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고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앞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는 것은 로마교황청의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행한 대회년 선포의 내용에서 엿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년이란 노예되었던 사람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며 팔렸던 땅을 되돌려 받는 등 누적된 모순을 바로잡는 것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는 제도입니다.

로마 교황의 대회년선포의 교서에서 부자인 나라들이 대회년의 정신에 따라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이 안고 있는 부채를 탕감해주도록 촉구한 것은 오늘의 세계의 문제와 환경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통찰한 것으로 세계인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속에서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생각을 나눌 것입니다.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동향

(제7회 '99-2-19 민간단체의 역할)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사회정책연구소의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시간의 마지막으로 지구환경과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회의에 참가하면서 실감하고 있는 최근의 큰 변화는 국제문제해결에 민간단체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되었던 지구정상회의는 원래 그 준비와 협약제정 등을 국가대표와 민간단체대표들이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가이익에 집착해야 하는 국가대표단과 지구환경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들간의 견해차이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끝내 각기의 지구 현장과 의제21 그리고 협약들이 제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기는 유엔기구의 각종 회의에서의 민간단체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민간단체의 위상이 상향조정된 것은 설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1997년 6월에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는 진일보해서 본회의에 민간단체 대표가 국가대표들과 나란히 참석해서 사안에 대한 의견개진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지만요.

실질적인 지구환경개선의 기여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압도적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그린피스>, <지구의 친구들>의 역할을 들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우수한 단체들의 활동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문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핵무기개발과 핵전쟁의 중단은 국가원수간의 합의에 의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환경보전의 문제는 지구상의 모든 생활인의 작은 일에서의 실

천적인 참여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정상의 의지 하나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21>에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며 정부주도의 행정보다는 정부, 기업, 주민들의 협력관계로 이루어지는 공동노력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집행체계 마련은 그 과제를 보다 잘 해결 수 있는 민간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3년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단체를 포함하는 지역사회의 각 계각층의 구성원들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의 환경행정을 시민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시민을 행정의 대상, 관리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정책의 입안단계에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형태는 다르지만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국제회의의 주제에서 <행정과 시민참여>라는 주제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세계의 그러한 추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동향>에 대한 일곱 번에 걸친 환경칼럼을 마치면서 이 지구는 우리가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쓰고 있기 때문에 잘 보전해서 후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새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